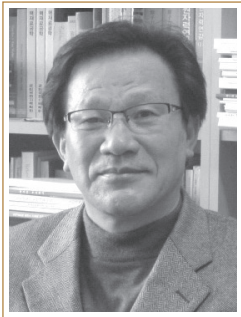




사용후핵연료 관리대책 공론화가 최우선이라 하지만 ...

김 승 평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전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

“
투명성, 독립성이라는 절차에 빠져 뚜렷한 방법에 대한 제시는 없이 가시적 언어 수단에 밀려 벌려놓은 판에 찬물을 끼얹는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산 업통상자원부는 한-미 간 원자력 협상중 사용후핵연료의 재활용과는 관계없이 우리나라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용후핵연료에 대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성, 독립성, 투명성이 담보된 공론화위원회를 발족시켜 공론화를 이끌어나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 같다.

이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사전 준비가 진행되고 있고, 예상되는 커다란 사회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해보는 일을 시도하고 있다.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 도출되도록

공론화의 핵심은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을 직접적 이해 관계자, 원전 주변 주민, 전문가, 시민 단체 등 광범위한 참여를 통해 정책 의사 결정을 초기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정 과정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전달하고 함께 깊이 생각하고 의논하는 과정을 이끌어감으로써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정책이 도출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원전을 찬성하는 사람이나 반대하는 사람들로 구분할 필요도 없다. 그동안 원자력은 정부나 전문가에 의해서만 정책이 결정되어 특정 기술 시설과 기술 하부 구조에 대한 정당성과 도입 근거에 대한 의구심이나 사회나 개인에 미치는 위험 요인들 때문에 사회 각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긴장이 고조되고 갈등이 분출되는 형태를 취해 왔다.

— 원자력산업 —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동안 원자력이라는 전기를 이용해 경제를 발전시켰고 생활수준 향상의 혜택을 누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당연히 풀어야 할 숙제이고 후대에 짐으로 넘기지 않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니겠는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은 과거 안면도, 굴업도, 위도 등에서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가운데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만이라도 선정하기 위하여 사용후핵연료(고준위폐기물)와 분리하여 주민 투표를 거쳐 20여년 만에 경주에 부지가 선정되었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가 부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질 갈등과 여론에 부담을 느껴 정책 결정을 미뤄온 채 이제 원전 내 임시 저장소에 보관돼 있는 것이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포화가 시작되어, 모든 방법을 동원해도 현재의 상태로 간다면 결국 원전을 멈출 수밖에 없어 이제는 사용후핵연료의 관리 대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이다.

원자력 분야 선진국인 미국은 유키타운에 영구 처분장을 건설하려다 주민 동의를 받지 못해 실패하고 2048년까지 마련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하였으며, 영국과 프랑스, 캐나다는 주민 반대에 대국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일본은 자치단체장(아오모리현 무쓰시장)이 리더십을 발휘하여 3년 만에 중간 저장 시설 부지를 마련했다. 정치적 신뢰를 바탕으로 중간 저장 시설을 50년만 운영한다는 점을 강조해 주민을 설득하였다.

스페인인 과거 30년간 정부가 결정을 회피하자 2004년 의회가 나서서 정부에 중간 저장 시설 확보를 만장일치로 촉구했다. 그 결과 14개월만에 유치 지역 지원방안을 마련했고, 2012년 중간 저장 시설 개념 및 저장 방식 확정 및 11개 지자체가 유치 의사를 표시했다.

공정한 공론화위원회 구성이 국민적 합의 도출의 첫걸음

이제 우리의 경우 뛰어난 리더십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에 의한 해결보다는 오로지 공론화를 통해 관리 정책을 결정하기로 한다면 공론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돼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여러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할 위원들의 구성이다. 위원들이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구성되어야 하는지가 이해 관계자, 학계, 원전 주변 주민, 시민 사회 단체, 일반 국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공정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첫걸음이라고 본다면 공론화위원회를 추천하는 가장 좋은 방법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에서 시행했던 몇몇 부처가 합동인사위원회를 구성해 450여명을 검증한 뒤 12명을 선임한 방법과 비슷한 형태를 취해 공론화위원회를 추천하기 위한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하는 추천위원회를 만들어 의견을 수렴하여 합의를 거쳐 위원들을 추천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것이 가장 올바른 선택인지에 대해서는 결과에 따라 판단되겠지만, 원자력 에너지는 보는 시각에 따라 갈등의 양상이 달라진다. 소통은 모든 갈등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사회적 도구라는 인식 속에서 일반적인 문화적 특성과 고유성을 침해하지 않을 수 있는 범위 내의 공론화위원회를 선정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고질적이고 가장 크나큰 병폐인 흑백논리라는 이분법적인 두 개의 가치를 중심으로 선택을 강요하는 그러한 공론화위원회가 되어서도 안되겠지만, 투명성, 독립성이라는 절차에 빠져 뚜렷한 방법에 대한 제시는 없이 가시적 언어 수단에 밀려 별려놓은 판에 찬물을 끼얹는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절차를 밟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